

2024년대비 보상법규 0-1주차 법규 베타답안1(석검)

[문제1] (30)

I 서 (논점의 정리)

공용수용이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의 예외이다. 공용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을 공익에 의해 침해하는 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 법제 하 가장 중요한 절차인 바, 이하에서는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 및 불복방법 상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II . 공용수용의 절차**1. 사업인정 (토지보상법 20조)**

사업인정이란 공용수용의 1단계 절차로,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 및 수용 행정의 적정화에 취지가 인정된다.

2. 사업인정 후 협의 (토지보상법 26조)

사업인정 후 협의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절차에 의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침해 원칙 구현과 신속

	사업 수행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수용재결의 의의 및 취지 (토지보상법 34, 50조)
	수용재결이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후 협의 불성립
	또는 불능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공용수용의 종국적 절차이
	다. 공용수용의 최종단계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
	취지가 인정된다.
Ⅲ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불복
	1. 사업인정의 의의 및 법적성질, 요건 (2009두1051)
	(1) 사업인정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사업인정은 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끼치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②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설권적 형성
	행위 (특허)이다. 또한 ③ 해당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
	지를 공익과 사익 상호 간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 바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2) 사업인정의 요건 (2009두1051)
	사업인정이 되기 위해선 ① 토지보상법 제 4조에 의
	거한 공익사업이어야 하며 ② 비례의 원칙을 통해 사

	업인정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은 물론 공익 및 사익 상호간에도 비교, 교량해야 하며
	③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능력 및 의사 또한 사업인정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
	수용재결은 ①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②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또한 ③수용목적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속행위성이 있지만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재량행위성을 갖는다.
	3.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불복방법 상 차이점
	(1) 토지보상법 상 명문 규정 여부
	수용재결은 그 불복방법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83조, 85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사업인정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상위법령인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불복 사유
	수용재결의 경우 절차, 내용의 하자 및 보상금의 증

감 등을 사유로 다룰 수 있으며, 사업인정의 경우 절차, 내용의 하자 및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일탈을 사유로 다룰 수 있다.

(3) 행정심판 제기

수용재결의 경우 토지보상법 8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이 특별법상 행정심판의 성질을 지니게 되어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30일 내 처분청을 경유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에 대한 재결은 토지보상법 86조 의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사업인정의 경우 행정심판은 임의주의이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80일 내 청구가 가능하며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4) 행정소송 제기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이의재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주의로, 이의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면 사업인정의 경우 토지보

상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쟁송에서 규정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 내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V. 결

공익사업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보호의 예외이다. 따라서 엄격한 절차와 위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최소한으로 침해되는 형태로 공용수용이 진행되어야 하며, 현행 법제에서 국민들에게 행정적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다양한 쟁송 수단에 대한 사전적인 안내 및 고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문제 2] (30)
I	서 (논점의 정리)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으로 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은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바, 이하 내용에서는 행정법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권의 권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의의 및 원칙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II	.행정법 일반원칙의 의의
	행정법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의미한다. 종래에는 조리 내지는 원칙 등으로 설명하였으나, 최근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명문화되었다.
III	. 행정법 일반원칙 및 관련 사례
	1. 비례의 원칙
	(1) 의의 및 근거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과 수단 사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 10조에 의거한다.

(2) 비례의 원칙의 내용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에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행정목적 달성에 있어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도로 침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의 공익성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에 근거한다.

(3) 관련 판례의 태도 (사업인정의 요건)

판례는 사업인정의 요건을 판단할 때 공익과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 및 사익 간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및 근거

신뢰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

판례는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가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며,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하는 데에 대하여 개인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어야 하며,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그 견해표명을 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계획재량청구권)

판례는 도시계획법 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장기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실권의 법리

(1) 의의 및 근거

실권의 법리란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다.

(2) 관련 법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의 징계를 하지 않은 후 상당히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실권의 법리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은 자격취소를 할 수 없게 된다.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3조)

(1) 의의 및 근거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질적 관련성이란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 양자를 모두 말하며, 행정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다.

(2) 관련 법리

사업인정 시 인과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없는 기부채납 부관이 결부된다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위법하게 된다.

IV 결 (사안의 해결)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제 발전,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사 관련 법령의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행정법 일반원칙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 끝 >

- 이 하 여 백 -